

『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지역 기업부설연구소는 '08년 179개에서 '16년 400개로 급증하는 등 중소기업의 독자생존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
- 중소기업 업종전환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, 지역 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주도형 R&D추진 필요
- 이에따라,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업종 다각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여 수직적 산업구조 탈피

3. 주요내용

- 출연 개요
 - (1) 출연 예정액 : 금489,000천원(시비)
 - (2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 - (3) 사업연도 : 2017년
 - (4) 사업대상 :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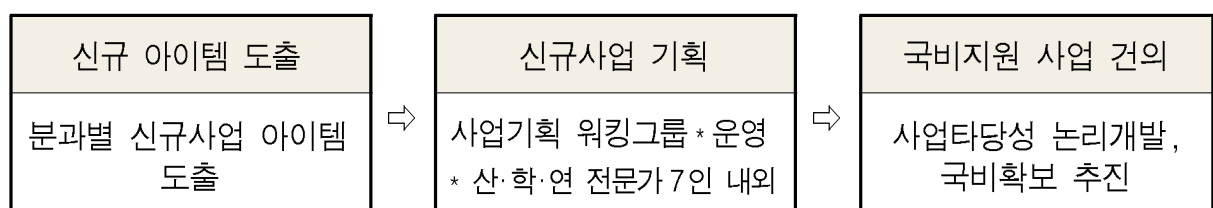
○ 주요 사업

- (1) 신사업 발굴기획 및 프로젝트 사업화 : 정부 R&D정책과 연계하여 산·학·연 기술수요 조사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획 과제 발굴
- (2) 파트너십 구축 및 기술교류협력 활성화 : 정부 R&D 과제 지역기업 유치를 위한 기술협력 체계 구축
- (3) 기업수요 대응형 연계 플랫폼 강화 : 중소기업의 중·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및 컨설팅
- (4) 정부출연 연구기관, 대학, Geri 등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」

구 분	지원내용	추진시기
국가R&D과제 기획·참여 지원	· 국가R&D사업 정보제공 : 산업부, 미래부, 중기청 등 맞춤형 R&D사업 정보 · 국가R&D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: 기술·시장 정보 분석,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등	‘17년중
신기술 상용화 추가 R&D 지원	· 신기술 상용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(기술전문가 매칭) · 신기술 완성도 제고지원 :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, 상용화 제품의 기능/성능향상	‘17년 상반기
기술역량 강화 교육	· R&D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, 지재산, 표준 등 교육 지원	

「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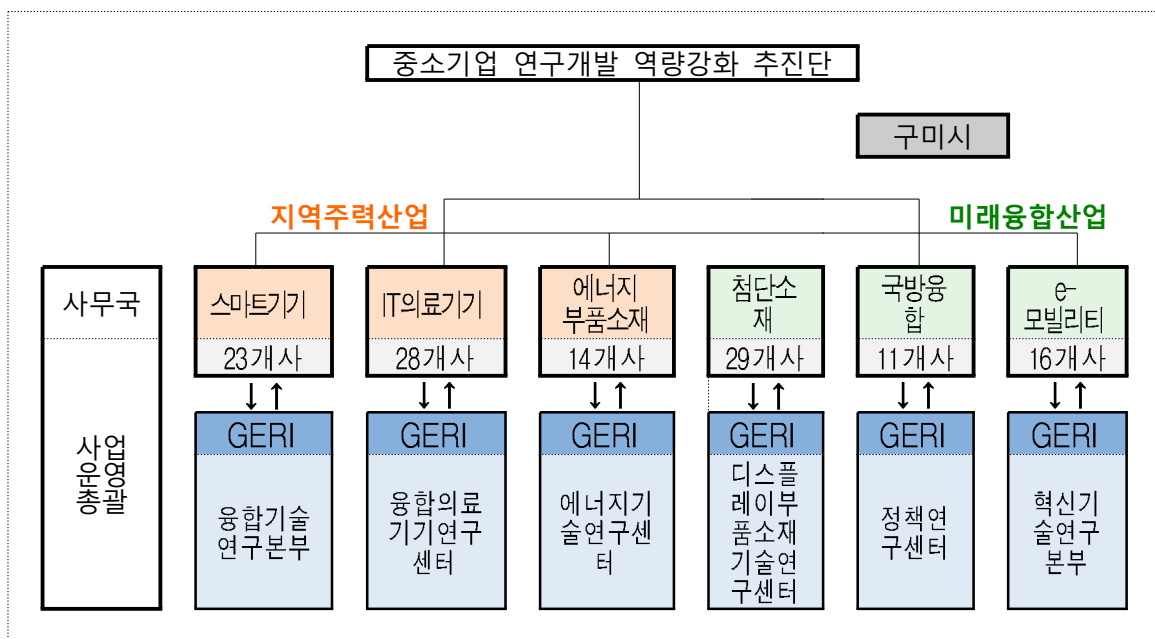


「중소기업 효율적 업종전환 지원」

구 분	지원내용	추진시기
업종전환 분야 탐색 지원	· 업종전환 분야 기술·시장 정보, 제품 기술수준 파악 제공	‘17년중
현안 애로기술 해결	· 연구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애로 지원 (기술전문가 매칭)	‘17년 상반기
시제품 제작지원	· 3D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	
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	· 지역대학, Geri 등 보유 장비 우선 사용·사용료 지원	‘17년 상반기 (수요조사) ‘17년 하반기 (사용료 지원)
기술이전 및 연계	· 정부출연 연구기관, 대학, Geri 등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 아이템 발굴	‘17년 하반기
기술커뮤니티 활동 지원	· 기업간, 기업-대학간 기술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지원	‘17년 하반기

○ 운영체계

- (1) (구미시)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결정 및 사업총괄
- (2) (사무국) 운영 총괄 실무 *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정책연구센터
- (3) (분과위원회) 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술교류 등

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20조제1항, 제4조제1항,
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4조제1항, 제3항, 제5조제1항
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제3조제1항, 제2항, 제4조
-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기 타 : 주요사업 실적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
 - 지역의 산학관연 주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 ‘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’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, 400개에 달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역량을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중심으로 모아 중소기업간의 경제네트워크 강화 및 일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R&D 과제기획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,
 - 대기업 중심의 직렬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고,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